

오늘 전북 보궐선거... 대선 풍향계 가늠

문재인 대 안철수 호남 민심 공적 확인 기회

민주당 - 국민의당 당 수뇌부 동원 총력전 펼쳐

12일 전북에서 치러지는 지방의회 보궐선거(광역·기초 각 1곳씩 2곳 실시) 결과에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이번 보궐선거가 내달 9일 있을 대통령 선거 전초전 양상을 띠며 호남의 대선 초반 민심을 공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 평가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당은 당 수뇌부를 동원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북 지역의 경우 오는 12일 치러질 보궐선거 지역은 전북도 광역의원(도의원) 전주 제4선거구와 완주군 기초의원(군의원) 라선거구 등 2곳이다.

전주 제4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는 국민의당 최명철 후보(60)와 무소속 김이재 후보(55) 등 두 명이 맞붙었다.

무소속 김 후보의 경우 선거 등록 직전까지 민주당 전북도당 고위 당직자(관광산업특별위원장)로 사실상 민주당 후보다.

4명이 등록한 완주군의원 라선거구의 경우 민주당 김정환 후보(61)와 국민의당 김희조 후보(45)의 양강 대결 속에 무소속 김덕연(55), 임귀현 후보(56) 등이 추격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박지원 대표를 비롯 중앙 당력을 이 두 선거구에 집중 투입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



인사 나누는 정세균 국회의장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창춘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세 확장에 나선 상태다.

박 대표는 지난 9일 전주와 완주를 잇따라 방문 대대적인 선거 유세에 나섰다. 전 정배 전 대표를 비롯 조배숙 정책위의장, 정동영 의원, 김광수 전북도당위원장 등이 연일 지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아 전주 도의원 보궐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있지만 문재인 후보 전북 지역 경선 선대

본부장을 맡았던 이상직 전 의원이 물밑에서 조직을 총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소속 지방의원의 비위 문제로 보궐선거가 이뤄질 경우 공식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 후보를 내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다만 공식 후보가 나온 완주군의원 라선거구에는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

롯한 전북도당 조직을 가동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무소속이었던 박성일 완주군수를 당에 영입하면서 상승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이 두 지역은 각 후보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다짐한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 간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뉴스시스

국민의당 광주·전남 경선에 원광대생 동원 의혹

수백여명 버스 타고 이동·일부는 강요... 전북선관위, 경비부담 주체 등 확인 중

국민의당 광주·전남 국민참여경선에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불법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파악에 나섰다.

11일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민의당 대선후보 광주·전남지역 경선에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버스 대절과 경비부담 등을 누가 했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경선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학생 동원을 지시한 이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선거법 여부를 떠나 대학교수들이 학

생 동원에 관여했다면 처벌이나 제재는 소속 학교에서 판단한다.

앞서 경선 당일 원광대학교 학생 수백여명은 버스 7대에 나눠 타고 광주까지 이동해 경선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경선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강요에 의해 참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대학 학생 동원 관련해서 조사 중에 있다"며 "그러나 조사 중인만큼 지금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1일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차떼기 동원, 불법 경선의 실체를 밝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당이 원광대학교 학생 수백여명

광주까지 관광버스로 실어 나르게 확인됐다"며 "또 일부 대학생들은 선관위 조사에서 강요에 의해 투표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는 등 경선 불법 동원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이번 사태를 두고 국민의당은 출당 조치 운운하면서 꼬리자르기식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아무런 문제도 없는 척 적폐 청산만을 외치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스스로 구태정치에 답답하고 있는게 아닌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차떼기 동원 불법 경선' 사실을 국민들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하고 백배 사죄하며 철저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근 기자

문재인, 이동전화 기본료 폐지 공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이동전화 기본료 폐지를 공약했다.

이울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개정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고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참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지만 기업은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으로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며 "이동전화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개정으로 (10월 일괄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 지원금과 이동통신사 지원금을 별도 표시해 고가 단말기의 가격 거품을 빼겠다"며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는 단통법 도입 때 추진했지만 제조사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좌절됐다.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해서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기업에 주파수를 경매할 때 각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겠다. 주파수 이동계획서에 통신비 인하방법을 포함시켜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세대, 소득, 지역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서 평등한 디지털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며 "취약 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울러 ▲싸고 편리한 데이터 이용 환경 구축(데이터 요금 체계 개편·데이터 요금 할인상품 확대 장려·데이터 이월제 도입)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 구축(모든 공공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통신비를 줄여서, 우리 집 지갑에 여윌 돈을 만들어드리겠다. 그 돈으로 여가 생활도 즐기고 가족과 외식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자유한국당 "사드 당론 변경 검토 국민의당, 진정성 의구심"

자유한국당은 11일 사드 관련 당론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국민의당에 대해 "배경과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제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이려면 환영한다"면서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보수 코스프레'에 발맞춰 일단 정권을 잡고 보겠다는 선거용 눈속임이 아닐까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당은 반드시 대선 전에 사드 배치에 대한 최종 당론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안 후보가 사드반대 당론 수정을 요구했다며 당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 배치에 반대해 온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뉴스시스

안철수 "사립유치원 독립운영 보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대형 단설 유치원은 시설을 자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을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17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유치원이 필요로하는 교직원 인건비, 보조교사 지원, 교육과정 등을 확대 지원하겠다"며 "유아 교육기관 교직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8시간 근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방과 후 활동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또 "표준 유아 교육비를 물가상승과 연동해 현실화하고 실제 지급되는 유아 학비를 표준 유아교육비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사 대 유아 비율 하향과 8시간 이상 교육시 보조교사 활용 및 시설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우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는 교사와
행복한 교생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강화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